

# 사업승계세제의 비교법적 분석

● 최선집 국세청 고문변호사

## I. 들어가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한도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상속 이외에도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의 상속의 경우도 이와 같다. 위와 같은 조세법상 조치는 사업승계에 관한 우대조치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입법례를 살펴 보고, 관련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 본다.

### 1. 사업승계의 의의

특별히 정의된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승계란 사업현재 경영자로부터 후임경영자에게로 사업이 이전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경영의 승계<sup>1)</sup>와 자사주를 비롯한 사업용 자산의 승계라는 것이다.

사업승계의 방법으로는, 친족 내 승계, 종업원 등 친족 외 승계, 제3자에의 매각 등에 의한 M&A가 있을 수 있다.<sup>2)</sup>

### 2. 사업승계세제

#### 1) 의의와 성격

사업승계세제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오너가 사망한 경우, 후계자인 자녀가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사업승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과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 경우 과세경감의 대상은 주로 그 사업에 관련된 주식이나 토지 등을 비롯한 사업용 자산이다.<sup>3)</sup> 과세경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영구적인 과세의 경감이 아닌 일시적인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 성격은 영구감세가 아닌 일시적 징수유예 혹은 납세유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납세유예제도와 의 관계<sup>4)</sup>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sup>5)</sup>

1) 회사의 경영방침, 체제, 종업원, 거래처의 승계가 주로 이에 해당된다.

2) 今川嘉文, 事業承繼法の理論と實際, 信山社, 2009, p. 3.

3) 田中 治, 事業承繼税制の現状と評價, ZEIKEN, 2012-9, p. 34.

4) 國稅징수법 제15조에서는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해뿐만 아니라 사업상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등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 자체를 유예할 수 있고, 결정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징수유예 혹은 납세유예라는 제도를 규정한 것인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유예제도를 두고 있어 사업승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기 시작 전에 관련 상속세액의 고지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성격상 납세유예 혹은 징수유예에 해당된다. 그리고 일정한 사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징수하므로 이 같은 점에서도 납세유예라는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 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음이 보통이다. 이 같은 성격의 우대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목적

사업승계세제의 목적은 사업승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제의 성격은 정책세제 그 중에서도 산업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을 띤다. 사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이유, 즉 사업승계촉진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용의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에 수반되는 사업용 재산의 승계의 경우, 상속세의 부담이 과중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사업계속을 곤란하게 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경영승계의 대상에는 종업원, 거래처, 고객 등을 포함하므로, 상속세의 부담에 의하여 기존의 경영권의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역경제의 활력의 유지와 고용확보가 불가능하게 된다.

## 3) 전통적 상속세과세 논리와와의 관계

한편, 기존의 상속세의 과세논리가 상당규모의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 재산이 특정의 상속인에게 우발적으로 이전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부(富)의 부당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달성하고 또한 이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상속세논리가 위 사업승계세제의 정책세제로서의 목적이나 방향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이나 방향성에서 정책세제와 기존 조세논리와와의 충돌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나 외국법인 임직원에게 대한 소득세감면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sup>7)</sup>을 주는 것이 외자도입을 통한 국내 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 내지 고용증대라는

6) Ibid, p. 34.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이하에서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을 하고 있다.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의 담세력에 상응한 조세부담이라는 응능원칙과 조세공평이라는 기존의 법인세, 소득세 논리와 상충된다. 그러나 각국이 경쟁적으로 외국계자본의 유치 더욱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율인하나 장기간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OECD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한 지도 오래 되었을 정도이다.

결국 이러한 상충문제는 고용유지와 경제활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과세공평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세제의 최종 형태의 결정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 시점에 있어서의 양 목표의 타협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상황의 악화 혹은 정체를 타파하여야 한다는 목적에 우선순위가 두어진다면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사업승계세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 같은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다면 사업승계세제는 약화될 것이다. 보다 미세적인 면에서는 이 같은 정책목표의 현실적 타당성, 그 달성 정도와 효과, 다른 대체수단이 되는 정책들과의 선택가능성, 이러한 사업승계에 우대조치를 취하는 데 따른 과세공평성 훼손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sup>8)</sup>

우리나라는 가업상속이라는 이미지로 사업승계세제를 가지고 있다. 사업승계세제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부의 공평을 내세우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상당히 보편화된 정책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용유지나 확대, 경제활성화 등에 반대할 정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이하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사업승계제도를 살펴 보고 우리 나라의 제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8) Ibid, p. 35.



## II. 다른 나라의 경우

### 1. 일본

일본의 사업승계세제의 시작은 1983년으로, 오너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과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평가방식을 바꾸는 정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도입되었다.<sup>9)</sup> 그러나 본격적인 도입은 2008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경영승계에 민법상 유류 분제도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유류분(遺留分)제도에 대한 특례도입, 금융지원조치 마련, 상속세경감조치 도입의 세 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주식의 분산방지와 주식의 집중에 의한 안정적인 사업승계가 중요하고, 경영자가 처음부터 후계자를 정하여 그에게 자사주식과 사업용자산을 계획적으로 넘겨주어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한다는 ‘계획적 사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sup>10)</sup>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가 마련되었다.<sup>11)</sup>

구체적으로는, 경제산업장관의 인정을 받은 비상장주식의 후계자(경영승계상속인 등)가 선대경영자의 상속에 수반하여, 그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간 당해 회사를 경

9) Ibid, p. 36.

10) 武田昌輔監修, DHC 相続税法 コメント, 第一法規, p. 5215 の 3.

11) 措置法 70条の7の 2, 措置法 70条の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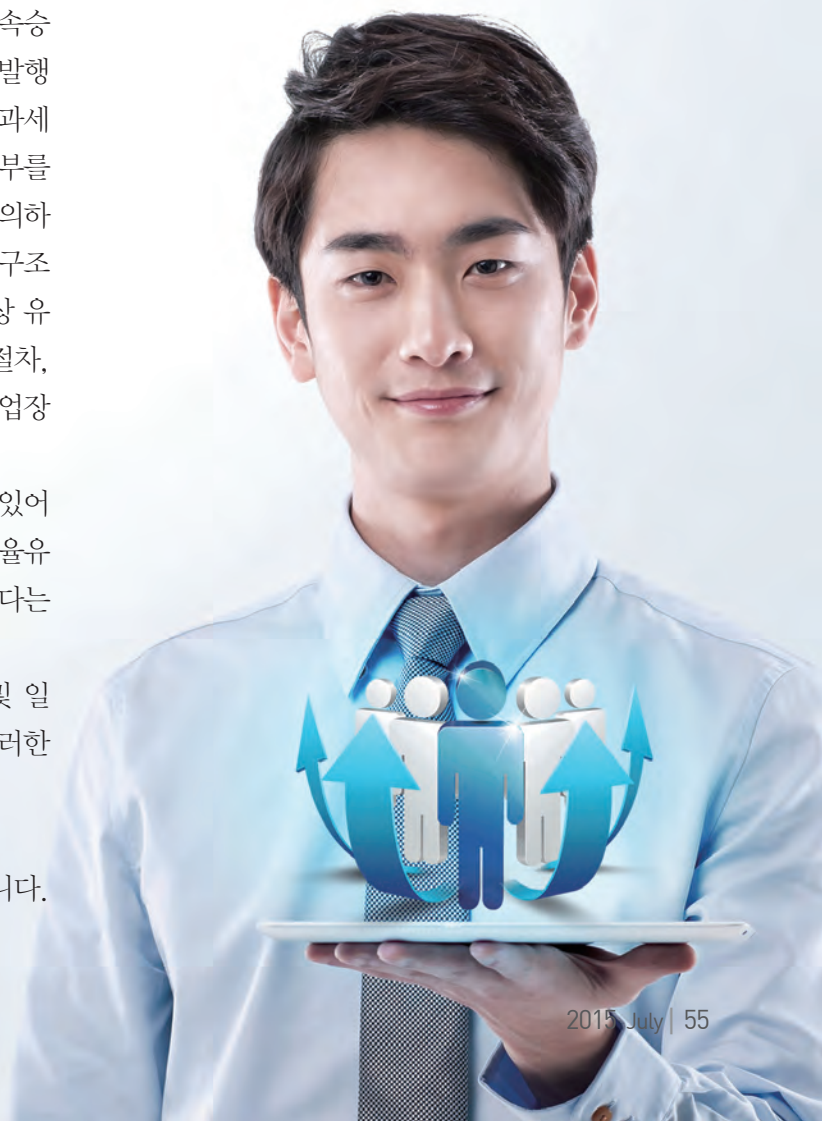


영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경영상속승계인 등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중 그 의결권 발행주식 등의 2/3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관련되는 과세가액의 80%상당액은, 그 후계자의 사망일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증여세의 경우도 선대경영자의 증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이와 유사한 구조이다. 5년간의 사업승계요건, 고용비율의 80%이상 유지 경제산업장관의 사전확인과 신고전의 인정의 절차, 그리고 승계이후에도 5년간의 매년 보고(경제산업장관 및 세무서장) 등의 사전·사후 요건이 각 있다.

이 제도는 친족간의 경영승계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 친족 외 경영승계에도 확대하는 문제, 80%고용비율유지가 사업환경에 따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도 있다는 지적 등이 있다.

그 이후에도 입법에 대한 사업승계세제의 확대 및 일부 운용상의 개정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근본은 유지되고 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II. 다른 나라의 경우

### 2. 독일

#### 1) 상속증여세제의 특징

독일의 상속증여세제는 유산취득세제도이고, 최고세율을 50%이다. 상속인을 세 구분으로 나누어 과세하며, 제1구분에 속하는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최고세율이 30%인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피상속인과 가까운 상속인에게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 2) 사업승계세제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인 2006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아 개정된 내용이다.

##### i) 적용대상자산

5년 이상의 사업계속 등을 요건으로 하여, 사업용자산, 농림업자산, 및 직접보유비율 25%를 초과하는 주식 등이다. 그러나 이에 예외가 있다. 관리자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용자산은 원칙적으로 승계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농림업 및 직접보유비율 25%를 초과하는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관리자산이라 함은 제3자에게 제공된 부동산이나 출자지분이 25%미만인 지분 등 사업경영이 아닌 자산관리 목적의 자산으로서 한정 열거된 것을 의미한다.

##### ii) 평가감비율 및 적용요건

사업승계세제가 적용되면 과세대상자산 평가액의 85%가 평가감(評價減)되어 결국 15%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더 강화된 요건<sup>1)</sup>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 평가감이 되어 과세부담이 없게 되기도 한다.

적용요건에는 고용유지요건과 주식보유요건이다. 고용유지요건은 인건비총액으로 판단한다. 인건비총액이 상속개시직전에 종료한 사업년도사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의 평균연간인건비총액의 400%(즉, 연 평균 80%)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그 비율에 상응한 감액분을 소급적으로 재계산하여 추징한다. 주식보유는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인만으로 사업을 하거나 종업원 20인 이하의 사업의 경우에는 주식보유기간요건만 적용되고 인건비유지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득 후 7년간 인건비총액을 700%로 유지하고, 주식보유기간을 7년으로 하고, 관리자산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게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3) 2014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러한 사업승계세제 중 상속세면제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감면규모와 방법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세 감면에는 적절한 정당화 사유를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까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면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종업원 20인 이하를 고용한 소규모기업에게 급여총액규정의 적용을 면제한 것은 비례원칙위반이다. 세감면 대상 기업재산의 50%이하가 관리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정당화 사유 없이 무제한 감면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로 하여 현재 독일에서는 법 개정 중이다.

## 3. 프랑스

### 1) 프랑스 상속세제의 특징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속세로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에 의한 재산의 이전으로 인한 등록세의 하나로서 과세한다. 따라서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이다.

과세방식은 유산취득세방식이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에 대하여는 전액면세이다.

### 2) 사업승계세제

사업용자산과 주식 등에 대한 상속시의 비과세제도가 있다. 이 업종은 비교적 광범위하여, 공업, 상업, 수공업, 자유업 농업활동에 적용된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75%가 비과세된다.

#### i) 개인기업의 경우 적용요건

피상속인이 유상으로 기업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이상 기업을 경영하였어야 하고, 상속인, 수증자 등은 4년이상 이를 경영하겠다는 보증을 하고, 상속인, 수증자 의 1인이 실제로 3년간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ii) 회사의 주식 등 경우의 적용요건

주식 등이 2년이상 주주간공동보유계약대상<sup>2)</sup>이 되어야 하고, 각 상속인, 수유자(受遺者), 수증자(受贈者) 등은 주식공동보유계약의 만료일로부터 4년간 이전된 주식들을 보유하여야하고, 상속인, 수유자, 수증자 또는 주식공동보유계약에 서명한 공동경영자 중 1인이 실제로 3년간 회사를 경영하여야 한다.

## 4. 미국

### 1) 상속세제의 특징

미국은 유산세제(estate tax)로 되어 있다. 즉 사망 시에 유산(납세의무자는 estate 재단이 된다)에 대하여 과세하고, 세금 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된다. 증여세와 일체가 되어있어 증여세와 공통된 세액공제가 생전증여 및 상속에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유산세폐지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입법화 되어 시행(2010년)되다가 다시 부활되었다. 유산세와 증여세의 면세액이 인플레이션 조정 전 금액으로 500만달러이다. 최고세율은 35%이다.

### 2) 사업승계세제

2001년 적격가족경영사업(qualified family-owned business)에 대하여 일정한 조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 공제액은 최고 675,000달러이다.

적용요건으로는 주된 사무소가 미국 내이어야 하고, 상속 전 3년간 대상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어야 하고,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가족이 상속 전 8년 기간 중 5년이상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어야 하고, 1인가족이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지분을, 2인가족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70% 이상을, 3인 가족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90%이상

2) 이 경우, 상장기업의 경우는 의결권의 20%이상, 비상장기업의 경우는 의결권의 34%이상이 보유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시에 피상속인의 개인경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총 소득금액의 35%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등의 요건을 두고 있다.

## 5. 영국

### 1) 상속세제의 특징

영국의 상속세세입 비중은 1%미만이다. 이는 상속세는 면세,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산세제이고, 배우자는 전액면세이다.

### 2) 사업승계세제

사업용자산의 평가감(Business Property Relief)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과 생전증여 모두 적용된다.

#### i) 적용대상자산

a. 사업자체, b. 파트너십에의 출자, c. 비상장회사의 출자(최저한의 보유비율제한없음), d. 상장주식(증여자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 e. 토지, 건물, 공장, 기계 등이  
고, a, b, c는 100%, d, e는 50% 평가감을 한다. 투자회사에의 출자나 자산관리회사, 부동산을 주로 관리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ii) 적용요건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2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증여의 경우는, 과거 사망 7년전 재산이 상속세과세대상인데, 증여자의 2년이상 보유한 자산이어야 한다. 일정재산을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의 이전에 대하여는 그 재산이전 2년전 이상의 기간에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III. 고찰(concluding thoughts)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개인자산과 달리 상속·증여세의 경우, 우대조치를 여러 국가에서 두고 있다.

사업용자산은 개인재산과는 달리 기업경영의 자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자유로이 이용·처분하기 곤란한 성격을 갖는다.<sup>3)</sup>

사업승계의 원활을 돕기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고용유지내지는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후적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사후적 요건의 엄격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일자리는 기업들의 영역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정부가 할 일이다.

사업용 자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입법의 문제이고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지만, 최대한 이러한 고용유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小林和也, 塩谷洋子, 諸外國における事業承継税制, ZEIKEN, 税研, 2012.9